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 향 : 금통위, 10월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
- 이 슈 : (경제)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와 시사점
(산업)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

■ 노후생활

- 테 마 : 한·독·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
- 세 심 록 : 보기를 피하기 위한 퍼팅, 버디를 잡기 위한 퍼팅
- 북 리 뷰 :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 동향

○ 금통위, 세계 경기둔화 우려감 등으로 10월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

- 대외적으로 세계 경기둔화 우려, 에볼라 공포, 유럽發 악재 등이 더해져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연준 출구전략 지연에 대한 기대가 증대
 - 대내적으로도 경제전망 하향 조정, 투자심리 회복 지연,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의해 하방 리스크가 부각
- 금통위, 10월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
 - 성장 모멘텀 확보, 물가 상승압력 약화,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부진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8월에 이어 추가 하향 조정한 2.00%로 결정
 - 한은 총재는 2.00% 기준금리 수준이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에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으로 판단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시사는 제한

○ 한국은행, 올해 GDP 성장률 3.5%, 소비자물가 상승률 1.4%로 예상

- **(GDP성장률)** 올해 GDP성장률은 3.5%로 전망되며, 2015년에는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내수부문에 비해 수출부문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되어 수출 기여도가 내수 기여도를 밀돌 전망
- **(물가)**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은 1.4%, 내년에는 2.4%로 전망
 -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이 완화되고 농산물가격 상승,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
- **(경상수지)** 올해 흑자규모는 840억 달러, 내년 700억 달러 내외로 전망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3년 6.1%에서 2014년에는 5%대 후반, 2015년에는 4%대 중후반 수준으로 하락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구 분 | | 2012 | 2013 | | 2014 | | | | | | | |
|------|------------|---------|---------|---------|---------|---------|---------|---------|---------|---------|---------|---------|
| | | 연간 | 연간 | 3/4 | 4/4 | 1/4 | 2/4 | 6월 | 7월 | 8월 | 10/2 | 10/17 |
| 실물지표 | GDP성장률(%) | 2.3 | 3.0 | 1.1 | 0.9 | 0.9 | 0.6 | - | - | - | | |
| | 제조업생산지수(%) | 0.7 | -1.6 | 0.1 | 1.8 | 0.6 | 0.3 | 0.3 | 4.0 | -2.7 | | |
| | 소비자물가지수(%) | 2.2 | 1.3 | 1.4 | 1.1 | 1.1 | 1.6 | 1.7 | 1.6 | 1.4 | | - |
| | 실업률(%) | 3.2 | 3.1 | 3.0 | 2.8 | 4.0 | 3.7 | 3.5 | 3.4 | 3.3 | | |
| | 경상수지(억달러) | 508.4 | 798.8 | 237.8 | 248.4 | 151.3 | 241.3 | 79 | 78 | 73 | | |
| 금융지표 | 국고채(3년)(%) | 3.13 | 2.79 | 3.01 | 2.90 | 2.87 | 2.82 | 2.75 | 2.56 | 2.54 | 2.33 | 2.27 |
| | 원/달러(원) | 1,126.8 | 1,095.0 | 1,112.2 | 1,062.1 | 1,069.0 | 1,029.6 | 1,019.4 | 1,019.4 | 1,025.4 | 1,043.4 | 1,066.5 |
| | 코스피지수(P) | 1,930.4 | 1,960.5 | 1,917.7 | 2,009.3 | 1,946.1 | 1,993.2 | 1,995.1 | 1,995.1 | 2,060.9 | 2,030.5 | 1,938.8 |

주 :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10/6~17의 평균값임.

□ 이슈 : (경제)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와 시사점¹⁾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 분석은 가구별 가계수지의 이동성과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즉 전년도에 흑자를 기록했던 가구가 올해 흑자를 지속(흑자→흑자)하거나 적자로 전환(흑자→적자)될 수 있고, 전년도에 적자를 기록했던 가구가 올해 적자를 지속(적자→적자)하거나 흑자로 전환(적자→흑자)될 수 있다.

○ 가계수지의 변화

첫째, 흑자가구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흑자유지(흑자→흑자)가구가 70.9%로서 가장 많았고, 흑자전환(적자→흑자)가구는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유형을 합한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둘째, 가계수지 양극화가 심화됐다. 흑자유지 가구의 흑자폭은 증가하고, 적자유지 가구의 적자폭도 증가하면서 둘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셋째, 적자가구의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적자가구의 흑자 전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넷째, 흑자가구의 흑자유지 비중이 높아졌다. 가구가 일단 흑자를 기록하면 그 흑자를 계속 유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적자 전환율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경제위기는 다른 소득계층보다 중산층 가구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쳤다. 경제위기 이후 적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중산층이 경제위기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적자유지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증가했다. 적자유지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중산층 가구도 한번 적자로 떨어지면 회복이 더욱 어려워 적자를 지속하는 중산층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일곱째, 중산층의 가계수지 개선이 미흡하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가구 가운데 중산층의 비중은 2009년 51.4%에서 2012년 48.0%로 감소하여, 최근 들어 중산층의 가계수지가 이동성이 악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산층이 가계수지 흑자를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 이어 올해에도 흑자를 유지하는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중은 더욱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산층의 가계수지가 더 악화되고 있으며, 가계수지의 이동성이 악화되는 한편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 시사점

가계수지의 건전성과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소득 확대를 유도하여 중산층의 적자 전환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등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통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중산층 및 취약 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비, 의료비, 식료품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와 시사점” 14-40호 (2014. 10. 10) 재구성.

□ 이슈 : (산업)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 2)

중국정부는 해외시장 개척과 자원 확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대외진출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200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외진출 전략을 국가의 공식시책으로 채택하여 10차 5개년(2001~2005년) 계획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UNCTAD에 의하면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규모(ODI Flow)는 1990년에 8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부터 연평균 30%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01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 중국 해외직접투자 규모/잔액 및 주요 관련 정책 >



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

UNCTAD 및 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국제적 위상, 투자주체, 투자지역, 투자산업, 투자형태 등 5가지로 나누어 각각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국으로써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 1990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Flow) 및 잔액(Stock)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 0.2%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05년부터는 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2013년에는 각각 7.2%, 2.3%를 기록하였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순위도 1990년 21위에서 2013년에는 미국과 일본의 뒤를 이어 세계 3대 해외직접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둘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유기업이 최대 주체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 기준

2)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 14-36호 (2014. 10. 13.) 재구성.

으로 국유기업의 투자금액은 연간투자액의 72.0%를 차지하였다. 민간기업의 투자금액 비중은 2005년 9.9%에서 2013년에는 25%로 급증하였다. 투자대상 산업은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에너지와 금속분야를 중심으로 직접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셋째, 지역별로 볼 때, 직접투자 비중은 여전히 아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은 2005년 50.3%에서 2013년 29.5%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최근 2년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의 투자대상 산업을 보면 대체로 에너지, 교통-물류, 부동산 등에 집중되어 있다. 넷째, 투자대상 산업별로는,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분야에서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2005~2013년 사이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5년 71.4%에서 2013년 61.2%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005년 79.7억 달러에서 연평균 34.3%의 속도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모든 분야중 규모가 가장 큰 627.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섯째, 투자형태별로 볼 때, M&A의 투자비중이 Green Field를 빠르게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M&A와 Green Field 형태의 투자비중은 각각 10.4%, 89.6%로 Green Field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013년에는 M&A와 Green Field가 각각 72.2%, 27.8%를 차지, M&A의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다. 중국 M&A 투자는 2005년 이후 급속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1990년보다 38배 정도 증가한 50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시사점

향후 중국정부가 투자절차의 간소화, 투자승인금액의 상향 조정 등 제도적 정비를 지속하면서 투자주체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변화는 중국 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비교우위를 보여주는바,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기업의 급속 성장에 대응할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중국은 에너지 등 전략적 분야에 대한 국유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소비재와 같은 상업적 수에 대한 민간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소비재 관련 기업들의 전략적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이 덜 된 산간지역이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항만 등 지역에서 그린필드형 투자 등 형태로 중국 투자자금을 적절히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우리 기업들이 중국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영권 방어 전략을 구축함과 동시에 산업 기술보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정부가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전략적인 해외투자를 유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다.

천용찬 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 테마 : 한·독·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

○ 요약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 일본 등은 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고령자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버 경제를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데 한국도 실버 경제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소비자 규모, 소득, 소비, 산업의 4가지 측면에서 독일, 일본과 비교함.

(소비자 규모) 한국의 고령인구는 2050년경에는 독일, 일본과 같이 전체 소비자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게 됨.

(소득)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은 2012년 기준 전체 가구 평균의 47%로 독일 68%, 일본(근로자 가구 기준) 74%에 비해 낮고 근로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63%로 독일 13.4%, 일본 43.9%에 비해 매우 높음. 이에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성향은 2012년 가처분 소득의 76%로 독일 86%, 일본 85%(근로자 가구 기준)보다 낮음.

(소비)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은 전체 가구 평균의 53%에 불과해 독일, 일본과는 30%p 이상 격차를 보였음. 특히, 보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2012년 12.9%로 독일과 일본의 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반면, 오락 및 문화에 대한 지출은 한국이 4.9%로 독일과 일본의 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음.

(산업) 한국 실버산업(광의의 개념)은 GDP의 5.4%로 독일 12.3%, 일본 19.6%에 비해 매우 낮는데 실버산업 발달의 기반이 되는 고령친화산업 자체에 대한 R&D 지원도 미미함.

한국의 실버 경제 기반을 독일, 일본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고령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해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는 기회 요인이 되나 고령자의 구매력이 낮고 실버산업 지원 등도 미비하여 성장이 제약될 수 있음. 이에 고령화를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고령 가구의 소득 안정성 제고, 소비 여력 확충, 다양한 소비 활동 촉진 및 실버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함 .

□ 실버 경제 추진의 필요성

○ 최근 고령화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실버 경제가 대두되고 있음

- 고령화가 빠른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실버 경제³⁾를 미래 성장전략으로 활용
 - 실버 경제란, 고령자를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3) 현대경제연구원, '실버 경제의 기회 요인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4-27호, 2014년 7월 9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독일 등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음

- Oxford Economics는 독일이 실버 경제 추진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함. 또한, 전세계 기업의 약 82%(EIU 설문 조사, 2011년)도 고령화를 지속 성장을 위한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국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50년경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되는 만큼 실버 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고령자의 소비 여력 등을 독일, 일본과 비교해 봄으로써 점검해 보고자 함

□ 한·독·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

- (비교 방법) 한국의 실버 경제 기반은 고령 소비자 규모, 소득, 소비 및 실버산업의 4가지 측면에서 독일, 일본과 비교

- 비교 국가: 한국과 2000년대 후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 일본을 비교
- 비교 지표: 실버 경제의 기반은 고령 소비자(65세 이상 인구) 규모, 고령 가구(세대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 실버산업의 4가지 측면에서 비교
- 비교 데이터: 3개국의 연령별 인구 전망, 고령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지출 등의 데이터를 활용

< ‘실버 경제’ 의 기반 비교 지표 >

| 대구분 | 소구분 | 비교 지표 |
|-----|-----------|--|
| 소비자 | 고령 소비자 규모 | - 기대 여명, 인구증가율 - 고령화률(총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
| 소득 | 소득 수준 | - 고령 가구의 자산 규모 - 전체 가구대비 고령 가구의 소득 |
| | 소득 구조 | - 고령 가구의 부분별 소득 비중 - 소비 성향(소비지출/가처분 소득) |
| 소비 | 소비 수준과 구조 | - 전체 가구대비 고령 가구의 소비 - 고령 가구의 부문별 소비 비중 |
| 산업 | 실버산업 규모 | - GDP 중 실버산업의 비중 |
| | 실버산업 지원 | - 고령친화산업 R&D 지원 규모 및 체계 |

주 : 고령 가구는 세대주가 65세 이상임.

1) 소비자

○ (고령 소비자 규모) 한국의 고령 인구는 2050년까지 3배 이상 확대되어 독일, 일본과 비슷한 전체 소비자 1/3을 차지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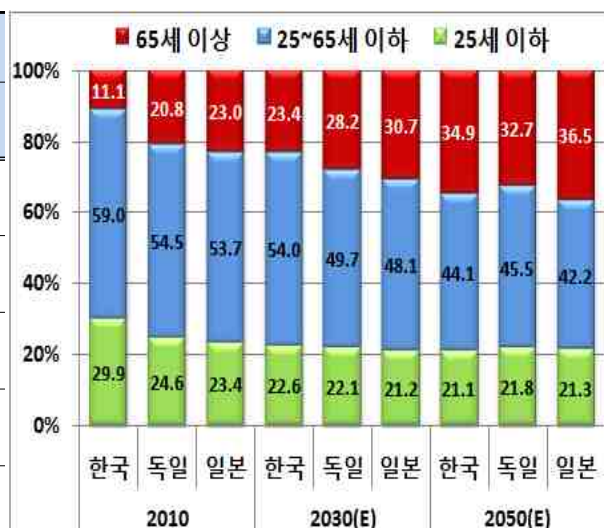
- 한국의 인구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 등으로 2030년부터는 감소하나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어나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됨
 - 한·독·일 모두 합계 출산율이 1990년대 이후 1.2~1.4명 사이로 세계 최저임
 - 독일과 일본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고 한국도 인구 증가율도 2010년 0.6%에서 2030년대 후반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반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0년 80세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50년에는 88.4세로 일본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됨
- 한국의 고령 인구는 2050년경에는 독일, 일본과 비슷하게 전체 소비자의 1/3 이상을 차지할 것임
 -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는 11.1%로 낮지만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30년에는 23.4%로 25세 이하 인구의 22.6%를 넘어서고 2050년경에는 34.9%로 인구 3명 중 1명으로 차지하게 됨
 -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과 일본도 65세 이상 인구가 25세 이하 인구와 이미 비슷하고 2030년경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증가율과 기대수명 >

| | 인구증가율(%) | | | 기대수명(세) | | |
|---------|----------|------|------|---------|------|------|
| | 한국 | 독일 | 일본 | 한국 | 독일 | 일본 |
| 2010 | 0.6 | -0.2 | 0.1 | 80.0 | 79.8 | 82.7 |
| 2020(E) | 0.4 | -0.2 | -0.2 | 82.6 | 81.4 | 84.3 |
| 2030(E) | 0.2 | -0.3 | -0.4 | 84.8 | 82.8 | 85.8 |
| 2040(E) | -0.1 | -0.4 | -0.5 | 86.7 | 84.1 | 87.1 |
| 2050(E) | -0.3 | -0.5 | -0.6 | 88.4 | 85.4 | 88.4 |

자료 : UN 인구전망 2012.

< 연령별 인구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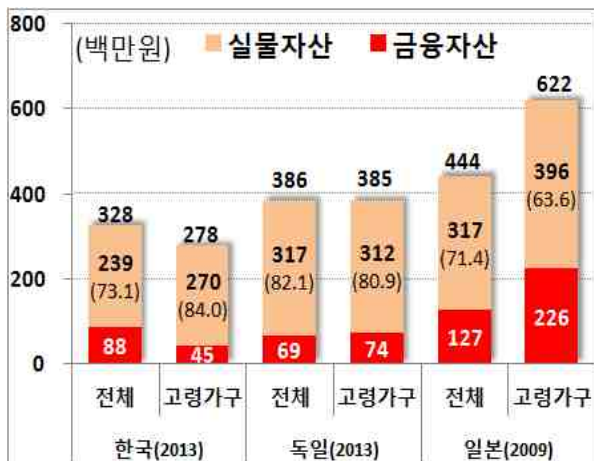
자료 : UN 인구 추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

2) 소득

○ (소득 수준) 한국 고령 가구는 소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 비중이 낮고 소득도 전체 가구의 50% 미만으로 독일, 일본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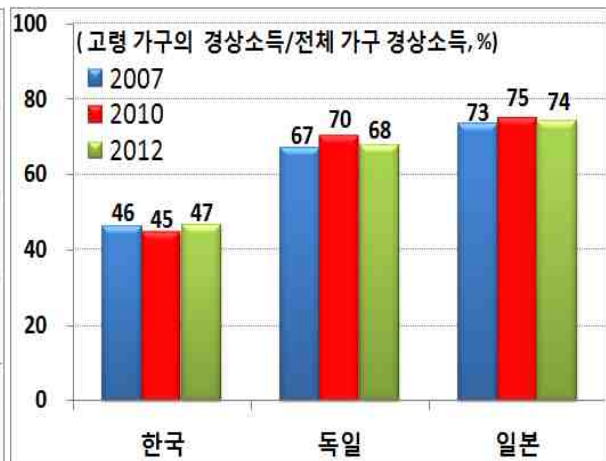
- 한국의 고령 가구는 독일, 일본보다 보유 자산이 적고 자산의 약 84%가 실물 자산으로 실제 소비로 활용 가능한 자산도 한정적임
 - 독일, 일본은 고령 가구의 자산이 전체 평균보다 많거나 비슷하지만 한국 고령 가구(가구주가 65세 이상)의 평균 자산은 약 2.8억원으로 전체 가구의 약 85% 수준임
 - 특히 한국의 고령 가구는 총 자산의 약 84%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독일 80.9%, 일본의 63.6%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실제 소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매우 한정적임
- 특히,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은 전체 평균의 50% 이하로 독일과 일본의 고령 가구보다 전체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소비 여력이 낮음
 -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경상소득 기준)은 전체가구 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독일은 2012년 기준 68%, 일본(근로자 가구 기준)도 74%⁴⁾에 달함
 - 특히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48%(2012년 기준)로 독일 79%, 일본 78.5%와 그 격차가 더욱 확대

< 가구별 자산 규모 >



자료 : 한국 금융복지 Microdata, 독일과 일본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주 : ()내는 총 자산대비 실물자산의 비중임

< 고령 가구의 소득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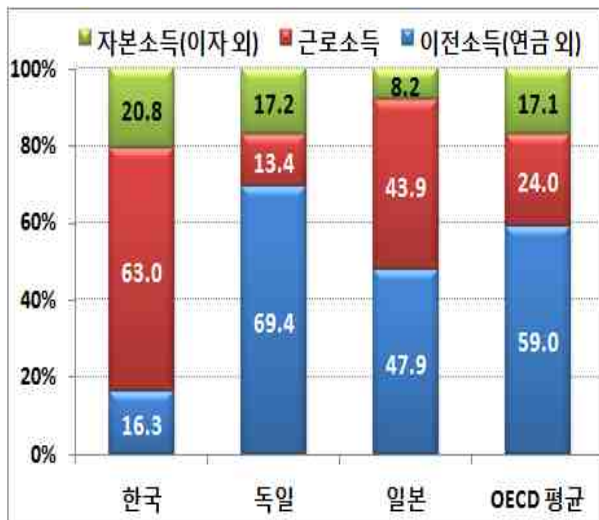
자료 : 한국 가계동향 Metadata 독일, 일본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주 : 일본은 근로자 가구 기준임.

4) 한편,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 무직 세대의 경우 소득 대부분을 연금에 의존하며 2012년 기준 고령 근로자 가구 경상 소득의 약 53%를 기록.

○ (소득 구조) 한국 고령자는 소득 안정성이 낮은 근로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소비 성향이 독일, 일본에 비해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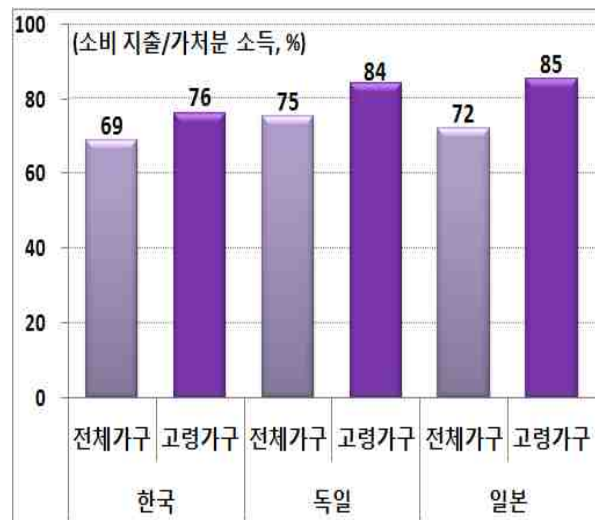
- 한국의 고령자는 근로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독일, 일본에 비해 높고 고령자 고용률도 30%대로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임
 - OECD에 따르면, 한국 고령 가구의 2000년대 후반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63%로 독일 13.4%, 일본 43.9%에 비해 높은 반면, 독일과 일본 고령 가구는 연금 등 이전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음
 - 이에 한국 고령자의 고용률은 2013년 기준 30.9%로 일본 20.1%, 독일 5.4%에 비해서 높았음. 또한, 한국의 실제 일자리 퇴직 연령도 남성 기준 71.1세로 독일 62.1세, 일본 69.1세 보다 길었음
-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은 근로 가능 여부에 따라 안정성이 낮아 소비 성향이 독일, 일본보다 낮음
 - 한·독·일 모두 고령 가구의 소비 성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전체 가구의 평균보다는 높았음
 - 그러나 소득 안정성이 낮은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성향은 2012년 가처분 소득의 76%로 독일 84%, 일본 85%(근로자 가구 기준)⁵⁾보다 낮았음

< 고령 가구의 소득 구조 >



자료 : OECD, Pension at a Glance, 2013.
주 : 65세 이상 가구임.

< 가구별 소비 성향(2012년 기준) >



자료 : 한국 기계동향 Metadata 독일, 일본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주 : 일본은 근로자 가구 기준임.

5) 한편, 일본의 65세 고령 가구의 무직 세대의 경우 소득에 비해 소비 지출이 더 많아 소비성향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 2012년 기준 이들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16.3만 엔인데 소비 지출은 20.3만 엔으로 125%를 기록.

3) 소비

○ (소비 수준과 구조)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는 전체 가구의 53%에 불과하고 소비 구조도 '보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높고 여가 생활에는 낮았음

-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은 전체 가구 평균의 53%에 불과하고 소비 증가율도 전체 보다 낮았음
 -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는 2012년 기준 전체 가구의 53%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독일 88.4%, 일본 86.4%(전가구 기준)에 비해 30%p 이상 격차를 보였음
 - 특히 한국 고령 가구는 소비 증가율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3.0%로 전체 가구 평균의 3.6%에 비해 낮은데 독일, 일본에서 고령 가구가 가계 소비를 이끈 것과는 대조적임
-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구조는 일본과 유사했지만 '보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독일, 일본에 비해 2배를 넘지만 '오락 및 문화' 등 여가 생활에 대한 지출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한·독·일 고령 가구 모두 식료품과 주거비에 대한 소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음
 - 하지만 한국의 고령 가구는 보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12.9%로 독일 6.4%, 일본 6.0%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지만 오락 및 문화는 한국이 4.9%로 독일 10.9%, 일본 10.4%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고령 가구의 소비 수준(2012년)과 증가율 > < 고령 가구의 부문별 소비 비중(2012년) >

| | 소비 수준 (고령 가구 소비 지출/전체가구 소비 지출, %) | 소비증가율 (2007~2012, CAGR) | | | | | |
|----|--------------------------------------|----------------------------|-------|----------------|-------------|-------------|-------------|
| | | 전체 가구 | 고령 가구 | 한국 | 독일 | 일본 | |
| 한국 | 52.9 | 3.6 | 3.0 | 식료품 및 주류, 담배 | 23.6 | 13.3 | 21.9 |
| | | | | 의류 및 신발 | 5.0 | 3.3 | 3.3 |
| | | | | 주거 및 수도광열 | 17.8 | 38.5 | 16.2 |
| | | | |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 4.8 | 4.9 | 4.0 |
| | | | | 보건 | 12.9 | 6.4 | 6.0 |
| | | | | 교통 | 8.1 | 11.0 | 7.5 |
| | | | | 통신 | 4.2 | 2.1 | 2.9 |
| | | | | 오락 및 문화 | 4.9 | 11.2 | 10.4 |
| | | | | 교육 | 1.3 | 0.1 | 0.3 |
| | | | | 음식 및 숙박 | 8.5 | 5.5 | 3.1 |
| | | |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 8.8 | 3.7 | 24.4 |
| 독일 | 88.4 | 2.2 | 3.2 | | | | |
| 일본 | 86.4 | -1.1 | -0.4 | | | | |

자료 : 한국 가계동향 Metadata 독일, 일본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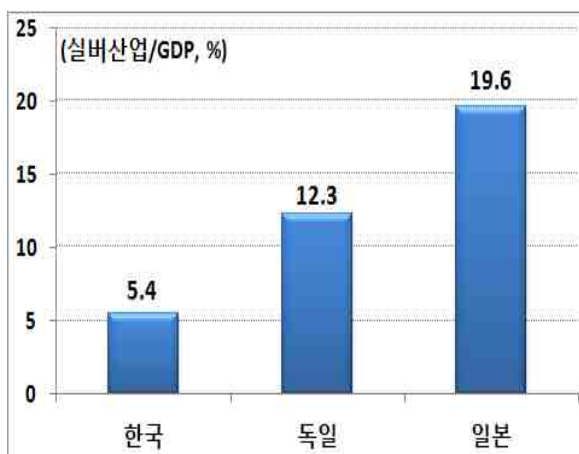
자료 : 한국 가계동향 Metadata 독일, 일본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4) 산업

○ (실버산업 규모) 한국의 실버산업 비중은 GDP의 약 5%대로 독일, 일본에 비해 낮음

- 한국의 실버산업은 GDP의 5.4%로 독일 12.3%, 일본 19.6%에 비해 낮은 수준
 -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 비중을 통해 광의의 실버산업 비중을 추정해 보면, 한국은 2012년 기준 GDP의 5.4%로 독일 12.3%, 일본 19.6%에 비해 낮았음
 -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12년 기준 10.4%, 독일 22.0%로 고령화률(65세 이상 인구/ 총인구)과 비슷했지만 고령자의 소비성향이 높은 일본은 33.0%로 10%p 높았음
- 다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은 2010년 22조에서 연평균 18.1% 성장하여 2018년 84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은 2010년 약 22조원에서 연평균 18.1% 성장하여 2018년에는 약 84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고령자를 위한 ICT서비스, 주택, 농업 및 요양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
 -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고자 20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장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

< 광의의 실버산업 추정 비중(2012년) >



자료 : 한국 가계동향 Metadata 독일, 일본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주 : 실버산업/GDP 비중=(가계소비/GDP)* (고령 가구 소비지출/전체 가구 소비지출).

<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규모 전망 >

(단위: 조 원, %)

| | 2010 | 2018 | 연평균 성장률 |
|------|------|------|---------|
| 정보 | 1.3 | 7.0 | 28.0 |
| 여가 | 5.2 | 14.6 | 13.7 |
| 주택 | 2.0 | 9.2 | 20.8 |
| 한방 | 1.5 | 2.9 | 8.6 |
| 농업 | 1.2 | 5.3 | 20.8 |
| 요양 | 2.2 | 8.5 | 18.1 |
| 기기용품 | 1.9 | 6.5 | 16.9 |
| 금융 | 6.9 | 27.1 | 18.8 |
| 합계 | 22.2 | 83.8 | 18.1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 VIP리포트, 2011.

○ (실버산업 지원) 한국은 실버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R&D 지원 등도 독일, 일본에 비해 미미함

- 한국의 보건·건강에 대한 정부 R&D 지출은 독일, 일본과 여전히 격차가 크나 2000년 이후 가장 빠르게 늘어나면서 고령화에 대비
 - 한국의 보건·건강(Health)에 대한 정부 R&D 지출은 2011년 9.4억 달러로 독일 15.2억 달러, 일본 20.0억 달러와는 격차가 크나 연평균 증가율이 14.2%로 가장 빠르고 전체 R&D 중 차지하는 비중도 7.9%로 세 국가 중 가장 높음
- 그러나 한국은 고령친화산업 자체에 대한 R&D 지원은 여전히 미미함
 - (한국) 2008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연구에 약 25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친화제품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지원은 10억 원대에 불과함
 - (독일) 실버 경제 추진의 선두주자로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는 AAL 기술에 약 8,700만 유로(1,200억 원)을 투자하고 고령친화제품 개발, 고령 기술, 원격 의료 등 고령 관련 R&D에 연간 3~4억€(약 4~5,000억 원)을 지원
 - (일본) 2001년 고령사회대책에서 고령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⁶⁾과 교통, 건축물 등으로 Barrier Free법⁷⁾ 확대를 도입하였고, 복지용품 및 유니버설 디자인을 활용한 생활용품 등에 연구개발에 지원을 확대함

< 보건·건강 정부 R&D 지출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

| | 2000 | 2005 | 2010 | 2011 | 연평균 증가율 |
|----|----------------|----------------|----------------|----------------|------------|
| 한국 | 217 (6.5) | 628 (9.5) | 810 (7.8) | 935 (7.9) | 14.2 |
| 독일 | 537 (3.6) | 926 (4.3) | 1,324 (4.3) | 1,522 (4.6) | 9.9 |
| 일본 | 1,183 (3.9) | 1,265 (3.9) | 1,865 (4.6) | 1,995 (4.4) | 4.9 |

< 국가별 실버 산업 지원 정책 >

| 국가 | 주요 내용 |
|----|---|
| 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2008년) - 보건의료연구개발, 항노화 산업 제품기술 등에 약 250억 원을 투자 ▪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10~15억 지원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는 AAL(Ambient Assisted Living) 기술 - 53개 프로젝트, 8,700만 유로 ▪ 고령 관련 R&D에 연간 3~4억€ 지원: 맞춤형 의료, 고령 기술 등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유니버설 디자인, Barrier free법(건축, 교통 등) 제도화 ▪ 실버 마크 제도(제 3자 서비스 평가) |

자료 : OECD.

주 : ()내는 정부 총 R&D 지출 중 비중임.

자료 : 국내외 자료 종합.

6)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으로 불리며 연령이나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

7) Barrier Free법은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축물 등의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임.

□ 시사점

○ 실버 경제 기반을 독일, 일본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고령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해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는 기회 요인이나 고령자의 구매력이 낮고 실버산업 지원 등도 미비하여 성장이 제약될 수 있음

- 한국 고령 가구는 독일, 일본에 비해 전체 가구대비 소득 수준이 낮고 근로 소득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소득 안정성도 낮아 소비 성향이 떨어짐
 - 소비 지출에 있어서도 의식주 이외에 의료비 지출 비중은 높으나 여가 생활 등에서의 소비는 저조하여 고령자의 다양한 소비 확대가 제한될 수 있음
 - 고령친화산업 자체에 대한 R&D 지원 등이 미미한 점도 실버산업 발달을 지연

○ 한국이 고령화를 새로운 수요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소득 안정성 제고, 소비 여력 확충, 다양한 소비 활동 촉진 및 국내 실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함

첫째,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 등 안정적 소득을 늘리고 고령 연령별로 차별화된 노후 소득 보전도 필요

- 국내 고령자들은 근로 소득 의존도가 높는데 근로 지속성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 성향이 낮아지는 만큼 연금 등 안정적 소득 비중을 꾸준히 높여야 함
 - 또한, 고령자의 소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므로 8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연금 연령 수당 지급 등의 소득 보전이 필요함

둘째,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등의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의료비 감축 방안도 보완되어야 함

- 정부는 주택연금(주택금융공사)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고령자의 주택 등 실물자산을 금융자산화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
- 또한, 내 고령자들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독일, 일본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만큼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 특성을 감안한 감축 방안을 마련

셋째, 다양한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고령자 대상 교육·레저·여행 상품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 관련 콘텐츠 제작 등에도 지원을 강화

-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향후 소비 여력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고령자 대상의 서드 에이지(Third Age) 교육⁸⁾을 확대시키고 고령자에 특화된 레저 및 여행 상품 등도 활성화하고 국내외 고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 지원

넷째, 실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과 고령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을 확대하고 기업도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⁹⁾ 확산 등으로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함

- 정부는 R&D 자금의 일정 부분을 고령기술(Gerontechnology)¹⁰⁾에 특화하여 지원하고 고령친화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펀드의 조성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히,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주거·교육과 ICT 간 융합, 서비스 로봇 시장¹¹⁾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기업들도 제품 개발시 고령자들의 사용 편의성까지 극대화시킨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확산하고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등으로 고령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나가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독일의 카이저 슈퍼마켓은 고령자의 쇼핑 편의성을 고려하여 쇼핑카드와 상품 진열 선반 등에 돋보기와 응급벨을 설치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2072-6217, chjss@hri.co.kr)

8) 서드 에이지(Third Age)는 유럽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생애 주기 중 40세 이후 30년 동안 인생의 2차 성장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단계를 일컫지만 최근에는 은퇴자들의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칭함. 한편, 영국에서 시작된 'U3A'(University of the 3rd Age)는 890개 이상으로 늘어나 철학, 언어, 심리학, 예술부터 체육, 게임 등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9) 독일에서는 2008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 어워드를 신설하고 세계적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을 잘 반영한 디자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음.

10) 고령기술은 노인학과 기술공학이 결합된 용어로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개선하여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예를 들어, 원격의료, 바이오, 게놈 연구, 서비스 로봇 등을 모두 포함.

11)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가 감성을 인식하는 가정용 로봇 페퍼를 2015년 상반기 시판할 예정이고 독일에서도 고령자의 생활보조로봇인 '케어 로봇(Care-O-bot)'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음.

□ 세심록(洗心錄)

○ 보기를 피하기 위한 퍼팅, 버디를 잡기 위한 퍼팅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존재한다. 이는 목표라는 기준점이 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실패를 회피하려는 욕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려는 욕구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득을 얻기보다 손해를 피하려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펜실베니아대학의 데빈 포프와 모리스 슈바이처는 인간의 위험회피 욕구를 연구하기 위해 프로 골퍼들의 퍼팅 250만 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골퍼들은 퍼팅의 난이도나 홀까지의 거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버디 퍼팅보다는 파 퍼팅을 할 때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프로 골퍼들은, 보기는 손해이고 버디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결국 골퍼들이 돈을 벌기 위한 파 퍼팅보다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한 보기 퍼팅을 위해서 좀 더 강한 집중력을 발휘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텃세를 부리는 동물들의 세계에서 방어하는 쪽이 성공하는 이유도 강력한 위험 회피 욕구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특정 지역의 소유자가 경쟁자의 도전을 받을 경우 대부분 소유자가 승리한다. 공격자에게는 새로운 이득을 취하기 위한 도전에 불과하지만, 방어자에게는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게임이다. 생각해보라. 지면 끝나는 게임인데 모든 것을 걸고 온 힘을 다하여 방어할 수밖에 없다.

기업을 혁신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의 위험 회피 경향은 조직과 개인 모두 현 상태에서 최소한만 변하는 걸 선호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된다. 인간은 어쩌면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혁신을 두려워하는 지도 모른다. 결국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기의식 공유와 같은 강한 외부 충격 조치들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위험회피 성향을 극복해야 한다. 혁신은 잘 짜여진 전략 정도가 아니라 인간 본성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요구된다.

대화의 기술은 귀를 기울이는 데 있다.

- 말콤 포브스(1919-1990): 경제잡지 포브스의 발행인

□ 북리뷰 :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¹²⁾

킨들버거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를 거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03년 타계하기 전까지 MIT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 문학적 경제사가로 불릴 만큼 수리경제학을 경원시켰지만, 세심하게 설계된 모델의 관점에서 주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유명.

○ 이 책은 금융위기를 야기하는 광기와 패닉, 붕괴의 진행과정과 궁극적 대역자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

- 시장도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비합리적 행동에서 야기되는 금융위기는 대체로 반복적인 유형을 갖고 있음
- 패닉과 붕괴로 인해 경제가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면 정확한 시점에 아주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궁극적 대역자가 필요

○ 광기 → 패닉 → 붕괴의 과정

-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제반 사건들은 '변위요인', 즉 거시경제에 작용하는 외생적인 충격에서 시작하며 신용의 팽창은 광기 국면으로의 전환 과정에 연료를 공급
- 친구가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판단력을 잃고 투기에 동참하기로 결정
- 경제적인 풍요감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번에는 과거에 발생했던 광기와는 다르다며 무엇이 다른지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내려 노력함
- 붕괴와 패닉은 광기의 기간 중에 있었던 모종의 불법, 부정행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이 드러나면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음

○ 금융위기의 국제적 파급

-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의 거품과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주식 거품은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 먼저 태국과 여타 아시아 국가의 거품은 일본의 자산가격 거품 붕괴 이후 수 년 동안 도쿄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의해 형성
- 이 거품은 1997년 하반기에 붕괴하고, 아시아 국가를 이탈한 자금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미국의 주식 거품이 가속화됨

○ 최종대역자의 역할

- 자산가격 붕괴에 따르는 패닉의 확산을 막기 위해 궁극적 대역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무 과다 상태에 빠지게 될 차입자들이 구제될 것이라는 견해와는 구분
- 최종대역자는 항상 구제에 나서야 하지만,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유지해야 함

¹²⁾ 찰스 P. 킨들버거, 로버트 Z. 알리버 지음, 김홍식 옮김,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굿모닝북스, 2011.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잠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